

헌법

1.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재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 데 선거는 기명투표로 한다.
- ② 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나, 부의장은 사임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③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
- ②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③ 헌법개정이나 헌법변천 모두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르는 헌법변경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④ 법은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법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은 헌법개정한 계설의 논거 중 하나이다.
- 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은 그 정치적 실존에 대하여 그 의지대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개정무관계설의 입장이다.

3.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보장 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은 근대에 비로소 성립되었다.
- ② 근대 이전의 헌법개념은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구성이라는 조직법적 개념이었다.
- ③ 근대 이후에는 조직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은 법률에 위임되었고 헌법은 권리장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 ④ 20세기 이후 세계 각국의 헌법전에는 국가적 조직이나 제도 이외에 경제제도나 정당제도와 같은 내용도 추가되고 있다.
- ⑤ 현대에는 수도(首都) 이외에 국기(國旗), 국가(國歌) 같은 내용도 헌법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4.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가.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실시하는 것
- 나. 양심에 반하는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판결
- 다. 가석방 대상자에게 준벌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
- 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 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

- ① 나,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라, 마 ④ 가,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5.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은 원래 국민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원칙적인 것이고 우선한다.
- ② 그러나 헌법이 국가최고법으로서 모든 법질서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 ③ 따라서 기본권의 이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기본권이 사법(私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구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 ④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는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나, 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취지가 바로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자는 데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 ⑤ 그러므로 국가조직법규나 절차법규 제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성격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6. 우리나라의 역대 헌정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원제를 규정하고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 ② 국무회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결기관이었던 적이 있다.
- ③ 하위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사실상 개정하였던 사례가 있다.
- ④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 없었던 적이 있다.
- 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사례로는 국회에 의한 간선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 두 가지가 있다.

7. 국가가 동의 또는 승인할 수 없는 행위는?

- ① 국군의 국외 파견
- ② 일정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 ③ 예비비의 지출
- ④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포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임

8. 평등선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1인 1표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
- ② 미국은 선거구획정을 정치문제로 보지만 지나치게 불평등한 인구 비례의 경우에는 헌법위반으로 본다.
- ③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편차 인정범위를 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로 판시하고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편차 인정범위를 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로 판시하였던 적이 있다.

9.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 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비례성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④ 적합성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기본권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관계가 적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⑤ 기본권의 제한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1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물론 헌법 소원심판에 있어서도 허용된다.
- ②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의 권한분쟁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 ③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
- ⑤ 정부의 법률안제출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11.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하여 헌법이 규정한 원칙으로는 의사공개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 ③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도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한다.
- ④ 국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 ⑤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입법기가 달라지더라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12.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법률로써도 할 수 없다.
- ②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방영금지처분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 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 ⑤ 저속한 표현과 음란한 표현은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성표현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지 않다.

13.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 ② 근로 3권의 주체는 육체노동자와 사무노동자를 포함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실업 중에 있는 자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 ③ 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이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 ④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한다.
- ⑤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유니언숍협정의 체결)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4.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 ③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다.
- ④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절차, 행정절차, 입법작용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상 원리로서 국회의 대통령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 ⑤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5.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위헌이다.
- ② 헌법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③ 헌법은 미신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 ④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 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개념에 의하여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는 이론도 있다.

16. 자유위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위임은 무기속위임과는 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 ②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일단 당선된 이후에는 자신이 선출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법적 의무가 없다.
- ③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 ④ 자유위임의 원칙에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의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 ⑤ 국회의원이 항상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17.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가.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 뿐이므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국회 내에서 또는 소속 정당에서 징계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ㄱ.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므로 휴회기간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ㄴ. 범법행위를 행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에 관하여도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ㄷ. 국회의원은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라.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무죄판결을 한다.	ㄹ. 어떠한 경우에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 ① 가 - ㄱ
- ② 나 - ㄷ
- ③ 다 - ㄴ
- ④ 라 - ㄹ
- ⑤ 라 - ㄷ

18.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재외국민이나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에게는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 ② 평등선거는 사회적 신분,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 ④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 ⑤ 공직선거 임후보시에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금전적 능력에 따른 차별을 유발하는 제도로 기탁금제도 자체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19.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초기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 ②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다.
- ③ 기본권의 충돌에서 대립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에 입각하여 혐연권을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⑤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적 효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사법상의 일반규정을 매개로 하여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있다.

20. 현행 헌법상 채택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 ①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제
- ② 대통령의 법률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권
- ③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제
- ④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권
- ⑤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 의결